

공 개



의안번호	제 13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7. 13. (제 13 차)	

○○○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직권재심 처리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2. 7. 13.

1. 의결주문

- ☐ ○○○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직권재심 처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증권선물위원회('18.7.18.)는 ○○○ 등 ●●●●● 직원 5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 ◇◇◇, ◆◆◆, □□□(이하 '◎◎◎ 등 4명')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선위가 최종 패소
 - 동 확정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은 ○○○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자 함

3. 주요골자

2018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른 ○○○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 붙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78조의2 제2항, 제429조의2, 제434조의2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2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0조, [별표제2호] 10.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나.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직권재심 처리안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18.7.18.) 의결에 따른
○○○에 대한 원조치(과징금 22,500,000원)를 취소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 [前 ●●●●●(주) 직원]

-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 주 소 : XXX XXX XXX XXX XXXXXXXX XXXX XXXX

☐ 직권취소 이유

○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 5명 중 ○○○○ 등 4명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하여 이를 취소하였고,

- 위 취소소송 원고들의 행위양태와 이들에 대한 증선위의 처분사유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의 사안과 동일하므로 제재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해 동 판결 취지에 따라 ○○○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자 함

☐ 예상 환급액("22.7.31. 환급기준 잠정산출금액)

○ 23,647,710원 (직권취소금액 22,500,000원 + 환급가산금* 1,147,710원)

* 과징금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환급가산금 이율 적용

관계 법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제척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0조(직권재심)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제2호] 10.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38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3. 2. 23., 2014. 3. 14., 2015. 3. 6., 2016. 3. 7., 2017. 3. 15.,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제19조의3(국세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개정 2013. 2. 23., 2014. 3. 14., 2015. 3. 6., 2016. 3. 7., 2017. 3. 15.,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제19조의3(국세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을 말한다. <개정 2013. 2. 23., 2014. 3. 14., 2015. 3. 6., 2016. 3. 7., 2017. 3. 15., 2018. 3. 19., 2019. 3. 20.>

제19조의3(국세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개정 2013. 2. 23., 2014. 3. 14., 2015. 3. 6., 2016. 3. 7., 2017. 3. 15., 2018. 3. 19.>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단
연 락 처	02-2100-2518